

# 추미애 장관 “한동훈, 수사 끝나면 감찰”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정 총리 ‘박원순 사건’ 사과 강경화 “시진핑 연내 방한 추진” 통합당, 공수처 위원 공세

21대 국회가 22일 첫 대정부 질문을 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과 이른바 ‘검언유착’ 등을 거론하며 날 선 공방을 이어 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 “수사가 끝나면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방한은 올해 안이라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가 곧 합헌으로 답변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두 분의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있는데, 헌법에 대해서는 현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회신했고 남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하루 빨리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여는 것이 능률이나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다른 국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는 동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을 보고 있어 말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현재 국무총리로서 정당의 문제에 대해 알기알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 의원과 추미애 장관 사이에 설전을 주고 받으며 일부 고성도 나오는 등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최 대표가 ‘(윤석열)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병가를 내고 채널 A 사건 감찰 지시를 회피하려고 한 데 대해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한 적이 있다’고 질의하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하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맞받아

면서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추 장관은 미래통합당 김태홍 의원과 감정이 섞인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 “주무 장관이 왜 침묵하느냐”며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언급했다. 또 법무부 장관 입장 가안문이 열린 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으로 옮겨갔다. ‘수명자’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법률 용어가 유출 증거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추 장관이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라고 거칠게 응대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즉각 “왜 자꾸 따지려고 하느냐, 답변만 하면 되지. 지금 국회에 싸우러 나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이 김 의원이 “장관님 기본 가라앉히고, 여기 와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싫은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돼 있지만, 모욕적 단어나 망신 주기를 위한 질문은 삼가 달라”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정석까지 직접 가서 항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방문에 응답 차원에서 시 주석이 방한하는 것”이라며 “정상 차원의 방문이 성사되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격상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강 장관은 “남북 관계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점을 정부는 물론 미국 측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각에서 연기론이 제기되는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중부세 올리고 증권거래세 내리고

당정, 세계개편 방안 논의... 소비 활성화·투자 촉진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경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중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 한국판 뉴딜 및

받침을 위한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 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성장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K-방역의 성과 등에 힘입어 경제회복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2분기 방역과 경제 피해의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의대생 10년간 4천명 더 뽑는다

당정, 오늘 추진방안 발표

향후 10년간 의사 인력이 4000명 더 선된다. 이들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거나, 기피 진료과목에 특화하게 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매년 400명씩 추가 인력을 뽑고, 이중 300명을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편차가 큰 소아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부분의 인력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선발된 이들은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지역

에서 일정 기간 필수 의료에 복무해야 한다.

나머지 100명은 기피 진료과목에 특화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등 임상 의사 양성과정으로 분리해 교육을 진행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우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7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경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 여권 ‘다주택 공직자에 불이익’ 법안 발의 잇따라

윤재갑·신정훈... 승진·임용 제한·형사 처벌 가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여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과 임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법안에서 ▲공개 대상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부동산 매각 또는 백지 신탁 의무를 가지며 ▲인사혁신처에 부동산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백지 신탁한 부동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상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도 나왔다. 같은 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다주

택 고위공직자가 60일 안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매각 대상자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대상자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교육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매각대상자가 되면 본인 및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60일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수탁기관은 180일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은 9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한병도 의원은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율을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양도소득세율을 매매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 최대 7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주택자의 단타 매매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안철수 “야권 무기력·비호감에 국민 외면”

‘온국민 공부방’ 인사말... “혁신만이 돌파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야권 혁신과 관련해 “가장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야권의 무기력, 비호감, 비공감에 대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온국민 공부방’ 인사말에서 “올해 초 귀국 때부터 일관되게 야권은 혁신 경쟁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했지만, 아직 체감할 만한 성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야권의 혁신과제로 국민 삶을 개

선할 의제 발굴, 공정성과 도덕성의 확실한 우위 확보, 국민과의 소통 등을 제시했다.

또 “때로는 자체적으로 때로는 다른 당의 더 좋은 것을 배우고 도입하는 방식으로 혁신 경쟁을 해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 지형과 권력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